

김승원 자진 사퇴 후폭풍... 추가 의혹 줄줄이

김영진 "靑 인사시스템 점검"

박원석 "탄원서로 임명 어려움"

나경원 "추 사과·검정서 교체"

‘신약 로비’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리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했지만 사퇴 배경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촉박되면서 여권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원조 친명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1일 오전 ds 라디오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되지 않게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말이 안으로 굽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신약 로비 관련 부자들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그 부하들이 2년간 11명의 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내용이었다”라며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데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에서 결론적으로 판단의 지점들이 약간 미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김 전 후보자를 지지했다.

“윤주은전과 성추행 의혹 등을 거론한 정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김 전 후보자 사퇴에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약 로비 관련 의혹 등은)인사청문회 기간에 제기했던 사안들이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김승원 의원이 적절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17일 김 전 후보자에 대한 탄원서와 청와대에 전달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당은 모르고 있었다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면 잘 몰랐을 것’이라며 “그걸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의원 불려서 물어보면 잘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는 지적에는 “이제법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인사실종과 인사 추적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며 그동안 부패했던 부자들을 인정하고 보다 촉박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집권 중반에는 그 로드맵들을 잘 준비해서 동일한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결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자 ‘청와대에서 책임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라면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특정 실세, 예를 들어 성남파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 두 사람(정진상·김현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스템내에서)자기 업무에 맞게 일하는 것이 본인과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본인들이 잘 안다고 본다”고 강변하며 “사실관계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게 얘기는 건 부작할한 것 같고 그렇게까지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영 의원이 장관 후보자 가는 경우 오랫동안 외정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여러 문제에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 외정 활동을 한다는 국회내 불문율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절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이태원 대통령을 기자회견에서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를 판단하고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 전 후보자 낙마 배경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들 탄원서가 고려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실 확인이 안됐더라도 저런 탄원서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임명)을(강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 전 의원은 “사실상 (탄원서 내용이)사실인 게 확인되면 (시간이)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탄원서가 아니라도 여론에서는 이미 부정적 판정이 난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즉시 채택해 강행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미)타도된 얘기”라며 “지금 탄원서에 포함돼 있다는 성추행 의혹, 보좌진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던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여당의 대응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보편 불복수’ 잘 된 인사’라며 필칭지 부실한 청문회를 거쳐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밀어붙였지만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누구 한 명 사과를 안한다. 그냥 후보자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덮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라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여당이 어떻게 자제할지에 관해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독감 예방접종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이플러스아침소녀원과 의원에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이날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 임신부를 시작으로 내년 6월 5일 이후 어르신까지 순차 진행된다.

연한뉴스

고 결정할 문제”라면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특정 실세, 예를 들어 성남파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 두 사람(정진상·김현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스템내에서)자기 업무에 맞게 일하는 것이 본인과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본인들이 잘 안다고 본다”고 강변하며 “사실관계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게 얘기는 건 부작할한 것 같고 그렇게까지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영 의원이 장관 후보자 가는 경우 오랫동안 외정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여러 문제에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 외정 활동을 한다는 국회내 불문율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절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이태원 대통령을 기자회견에서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를 판단하고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 전 후보자 낙마 배경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들 탄원서가 고려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실 확인이 안됐더라도 저런 탄원서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임명)을(강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 전 의원은 “사실상 (탄원서 내용이)사실인 게 확인되면 (시간이)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탄원서가 아니라도 여론에서는 이미 부정적 판정이 난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즉시 채택해 강행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미)타도된 얘기”라며 “지금 탄원서에 포함돼 있다는 성추행 의혹, 보좌진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던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여당의 대응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보편 불복수’ 잘 된 인사’라며 필칭지 부실한 청문회를 거쳐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밀어붙였지만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누구 한 명 사과를 안한다. 그냥 후보자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덮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라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여당이 어떻게 자제할지에 관해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탄원서가 아니라도 여론에서는 이미 부정적 판정이 난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즉시 채택해 강행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실 확인이 안됐더라도 저런 탄원서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임명)을(강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 전 의원은 “사실상 (탄원서 내용이)사실인 게 확인되면 (시간이)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탄원서가 아니라도 여론에서는 이미 부정적 판정이 난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즉시 채택해 강행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미)타도된 얘기”라며 “지금 탄원서에 포함돼 있다는 성추행 의혹, 보좌진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던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여당의 대응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보편 불복수’ 잘 된 인사’라며 필칭지 부실한 청문회를 거쳐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밀어붙였지만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누구 한 명 사과를 안한다. 그냥 후보자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덮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라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여당이 어떻게 자제할지에 관해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탄원서가 아니라도 여론에서는 이미 부정적 판정이 난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즉시 채택해 강행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미)타도된 얘기”라며 “지금 탄원서에 포함돼 있다는 성추행 의혹, 보좌진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던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여당의 대응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보편 불복수’ 잘 된 인사’라며 필칭지 부실한 청문회를 거쳐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밀어붙였지만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누구 한 명 사과를 안한다. 그냥 후보자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덮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라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여당이 어떻게 자제할지에 관해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전직 보좌관들이 담에 (김 전 후보자 문제를)수차례 재보고 건의했는데 인사 청문안이 전직 통과되고 곧 임명을 것 같으니가 언론사에 보도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라며 “김 대표 역시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이제는 답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김 전 후보자의 경기도당 당비 유용 의혹을 겨냥해서도 “자제 강요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 책임은 아니라더라도 가법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기자 joy@siminilbo.co.kr

나 의원은 이날 공개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 정도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탄사원통”이라고 하는 김영진 청와대 제부속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인사 라인의 교체도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인사 라인인 김 실장을 제일 먼저 바꿔

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전직 보좌관들이 담에 (김 전 후보자 문제를)수차례 재보고 건의했는데 인사 청문안이 전직 통과되고 곧 임명을 것 같으니가 언론사에 보도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라며 “김 대표 역시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이제는 답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김 전 후보자의 경기도당 당비 유용 의혹을 겨냥해서도 “자제 강요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 책임은 아니라더라도 가법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기자 joy@siminilbo.co.kr

나 의원은 이날 공개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 정도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탄사원통”이라고 하는 김영진 청와대 제부속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인사 라인의 교체도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인사 라인인 김 실장을 제일 먼저 바꿔

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서울시, 핀테크 기업 육성... 예비창업자도 지원

제2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

핀테크 경쟁력 세계 7위에 오른 서울시가 차세대 핀테크 주자 발굴에 나선다.

서울시는 초기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에 2027년 신규 입주할 유망기업 21개사를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지수(GFCI) 핀테크 분야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시는 초기기업을 육성하는 ‘제2서울핀테크랩’과 성장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서울핀테크랩’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서울핀테크랩은 초기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사업으로, 지난 2023년 1월 개관 이후 누적 120개사를 육성했다. 현재 48개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600평 규모로 조성된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을 위한 독립 사무공간, 멘토기업들을 위한 개방공간, 공동회의실 및 교육장, 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2서울핀테크랩 지원기업은 누적 매출 483억원, 투자유치 140억원, 신규고용 415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입주기업 ‘테라일’은 ‘CES 2025’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21개사 내외로, 독립형 사무공간이 제공되는 ‘입주기업’ 9개사 내외와 핫데스크 형태의 좌석을 이용하는 ‘텔러빌리티’ 12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도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기존 창업기업 중 상에서 창업 이전 단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유망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입주기업은 창업 3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액 20억원 이하인 핀테크 법인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매년 연장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텔러빌리티는 창업 7년 이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입주 후 3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신청기업에는 공익에 위치한 제2서울핀테크랩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부터 투자유치, 시장 진출까지 성장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육 프로그램에는 ▲기업 진단 및 전문 멘토링 ▲IR 역량 강화 및 투자사 모임(Meet-up) ▲금융 규제 대응 및 블록체인 특화 교육 ▲국내·외 시장 진출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기관의 투자 검토를 통한 직접 투자 및 TIPS 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2일간 진행된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구체성, 기술성, 시장성 및 핀테크 사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11월13일 최종 합격 기업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는 모집기간내 제2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핀테크 경쟁력이 역대 최고인 세계 7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서울에서 계속 나오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경기도,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는 2029년 11월까지 연장... 부동산 투기 방지

경기도가 지난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19일부터 2029년 11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아

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재지정 만료일을 2029년 11월9일로 정해 인근 ‘의왕 오전·광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일과 맞췄다.

인접한 개발예정지의 투기수요 유입을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기억과 그림을 담은 ‘2026 미주작가 초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시가 주최하고 고송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이번에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120여건 인연 작품포함에서 시작된 한인 인연 예술작품에서 시 작된 한인 인연의 역사를 의미해 되새기며 마련됐다. 타국에서 지

열한 삶의 타점을 일컫는 미주 한인 작가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 예술을 매개로 고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전시에는 미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작가 22명 이 참여해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고국의 풍경, 사람, 그리고 한국적 정서를 담아낸 작

품 5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가 열리는 제물포갤러리에서는 700만 제물포도가 고국의 근을 잊고 소멸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이번 초대전은 문화예술을 통해 인연과 제물포가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작가 중 mcs@siminilbo.co.kr



SAMSUNG

9100 PRO

새로운 시대, 혁신의 퍼포먼스

한국총판 (주)에스케이 테크놀로지 | 한국총판 (주)에스케이 테크놀로지 | 한국총판 (주)에스케이 테크놀로지 | 한국총판 (주)에스케이 테크놀로지

한국총판 (주)에스케이 테크놀로지 | 한국총판 (주)에스케이 테크놀로지 | 한국총판 (주)에스케이 테크놀로지 | 한국총판 (주)에스케이 테크놀로지